

중국 '광물자원법' 전면 개정... 희토류 무기화 가속

수출통제·비축제도 법제화 세관 검사에 1~2개월 지연도

드론·전기차·방산분야 타격 美·日 등 공급망 다변화 나서

중국의 '개정' 광물자원법이 1일 발효됐다. 작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현지 관영 매체들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1986년 제정 이래 최초의 대대적 개정이다. 전면적 체계적 광물안보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마중 갈등 속에 특정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넘어 그 지배력의 전략 무기화 행보를 풀이된다. 국가 승인 절차를 규정해 무단 탐사·채굴을 금하는 게 제정 당시의 취지였으며 1996년 2009년 개정 역시 주로 법적 책임 소재와 처벌 수위를 높였을 뿐이나 이번 개정에선 희토류의 안보적 의미와 대외 무기화 가능성이 뚜렷해졌다.

1조에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 목표가 추가됐으며 3조에선 광물자원의 개발·활용·보호 관련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전략적 인 국가안보 관점을 관철함으로써 발전과 안전을 총괄'할 것을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국방 등 측면에서 중요한 광물

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보호하며 비상대응을 위한 비축제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앞서 중국 자연자원부가 "국내 광물자원 수요와 소비가 날로 증가하고 녹색 저탄소 혁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통제권 다툼이 강대국 간 경쟁의 핵심"이자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중(重)희토류(터븀·디스프로슘·홀름·에르븀·톨륨·이트륨·루테튬·이트륨) 공급량의 99%, 자석 생산량 90%를 점유한다.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했다. 이로써 전 세계 자동차·방산·로봇 산업이 모두 타격을 입었다. 마중 관세전쟁 휴전 후 이 문제가 봉합됐음에도 중국 측 수출 통제가 여전히 있다고들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기약 없는 통관 지연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같은 달 10일 마중 2차 고위급 런던 회담에서 희토류 금수 수제를 풀기로 합의했으면서 공식 통제 목록에 안 들어간 품목들까지 추가 검사나 화학 분석을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요즘 중국 세관 당국이 '자석'에 특히 민감해 "검사가 1~2개월 걸리기도 한다"는 현지 업체 관계자들 하소연이 전해



중국 희토류의 약 80%가 매장된 내몽고자치구 바오터우의 광산. 고비사막 끝자락에 270만 명 인구의 산업 도시인 이곳은 채굴 시설까지 모여 있어 '희토류의 수도'로 불린다. 큰 경제 수해를 누렸으나 환경 재앙이 수반됐으며 주민 암 발병 확률도 매우 높다. (게티이미지)

졌다. 해당 물질 전혀 없어도 세관검사 대상 한 컨테이너에 실리면 덩달아 통관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 FT는 이게 전기차 모터, 드론 및 첨단 무기, 항공우주 분야, 풍력 발전기,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등 정밀전자에 필수 소재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산업전략적 이유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짚었다. 미국·유럽연합(EU)과의 기술패권

전쟁 한가운데 희토류 수출 통제란 중국의 주요 카드인 셈이다. 자석 수출신청서에선 정확한 사용목적, 구매자의 최종 국명, 자석의 자기 특성 및 성능 등급, 포함될 제품의 수출 재판매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미국·대만·일본 등으로 흘러들어가 가능성까지 강력 경계한다.

2022~2024년 미국·일본·네덜란드 등이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도 중국은 희토류 금수로 맞섰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일부 서방계 대기업이나 방위산업 관련 최종 사용자가 포함된 주문의 경우 중국 세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수개월째 보류될 때가 있어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나온다. 옌스 에스켈렌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허가 승인(과정)이 개선되긴 했지만 정적 안정적 예측 가능한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기업과 EU 당국 등이 최근 몇 주 '긴급수출 승인요청' 목록을 전달해서야 겨우 승인 받은 점도 중국 정부가 언제든 이용할 카드를 재확인시켜 준다.

중국 내 서방 기업 대상의 최근 설문조사에선 60% 넘는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럽계 고위 임원이 희토류와 자석의 수출 허가 획득 이후에도 세관의 추가 검사로 인한 배송 지연 사례가 있다며 "블랙박스 분석처럼 누가 분석하는지, 얼마나 걸릴지, 현재 진행 단계가 어디쯤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 때만 해도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해 미국·대만·일본 등으로 흘러들어가 가능성이 강력 경계한다.

국내 정제시설을 건설 중인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자원 확보에 노력하는 EU도 마찬가지다.

2019년 트럼프 첫 임기 시절 마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본격화해 20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부과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희토류 광산 현장을 방문해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암시한 제스처로 해석됐었다. 실행하지 않은 채 시장에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평가되지만 점점 쉽게 쓸 수 없는 카드가 되는 게 현실이다. 시장 내 탈중국화가 심해지고 각국이 저마다 자구책을 강구하는 추세다.

한편 지난달 26일자 영국 일간 가디언에선 "희토류가 중국에 경제적 축복을, 환경 측면에선 재앙을 남겼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내 희토류 80%가 매장된 내몽고자치구 바오터우시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6만5000위안(약 3100만원)으로 중국 전국 평균 9만5700위안(약 1800만원)을 크게 웃돈다. 희토류로 인한 이 도시의 수익이 작년에만 1000억 위안(약 19조 원) 이상이었다. 그러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방사성 폐기물이 수자원 오염 등 주변 환경을 망가뜨렸다. 주민 건강 악화도 심각하다. 이를 줄일 기 술이 있지만 비용 문제로 거의 안 쓴다고 가디언은 전문가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임명진 기자 imms@skyedaily.com

트럼프, 시리아 제재 21년 만에 해제... 중동 정세 요동

미군 공습 후 이란 약화 속 '친미국' 시리아' 출현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시리아 제재를 공식 해제했다. 21년 만의 획기적 조치다.

1일자로 발효된 이 행정명령엔 "2004년 5월 11일 발효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 제재를 역시 다 사라졌다. 이 결정의 배경으로 트럼프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야메드 알사라 정부

의 긍정적 조치 등 지난 6개월간 시리아의 발전적 변화를 들었다.

트럼프는 이어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서 이웃 나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 안전을 보장한다면 시리아의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가자전쟁 발발 이래 이란 대리세력들의 약화와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구도 재편이 전망되는 가운데 '친미국 시리아'의 출현이 기대된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

명령이 이들 반미국가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한 심대해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5월 중동 순방 때 언급한 대(對)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의 실행이다. 당시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아흐메드 알사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을 첫 대면한 후 "짧고 매력적인 짧은이" "탄탄한 과거를 가진 투사"라며 호감을 표했다. 그달 23일부터 미 재무부·국무부가 시리아에 일관허가(GL)25를 발급하고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에 따른 제재의 180일간 유예 등 부분적 해제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말 정권 붕괴 직전 러시아로 도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5월 14일 중동 순방 당시, 시리아 반군 출신의 아흐메드 알사라 임시대통령을 첫 대면해 악수하고 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동석한 가운데 알사라를 만난 후 "짧고 매력적인 친구" "강인한 남자" "탄탄한 과거를 가진 투사"로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되며 ISIS(이슬람국가)나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핵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역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 6월 발효된 '시리아 법'은 특히 강력한 제재였다. 아사드 정권 및 그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에게 강력한 2차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러시아·이란·레바논 헤즈볼라 등 아사드 지원 세력을 겨냥했다. 제재 범위는 은행·건설·에너지·군사 협력 등 포괄적이었다.

1979년 12월 29일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과 함께 무기 수출 금지 및 외교·금융 제한 등 초기 제재가 시작된 이래 2003년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이듬해 5월 포괄적 제재를 개시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광범위한 경제·금융·무역 제재까지 도입된다. 그해 8월 석유 분야 금수 조치가

대표적이다. 2019~2020년 '시리아 시민보호법'은 2019년 12월 통과돼 이듬해 6월 17일 본격 발효된 가장 강력한 2차 제재였다.

2014년 시리아 군 출신의 익명 망명 사진가가 '시리아'는 코드명으로 1만1000구 이상의 시신 사진을 공개했다. 고문·아사구타 등으로 숨진 민간인들이었으며 아사드 정권의 조직적 인권유린 입증 자료로서 제3국 인사까지 처벌 가능한 강력한 2차 제재 법 마련의 근거가 됐다.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국민 전체를 향한 공격" "주권 침해"를 주장했고 러시아·이란과의 공조가 강화됐다. "암시장·밀수경제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다. 제재 우회를 위해 레바논을 통한 밀수, 러시아 루트로의 원유 수출, 이란 석유 보조금 등이 활용됐다.

임명진 기자 imms@skyedaily.com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